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(EU)과 일본 등 선진국은 1차 의무감축 기간인 2008~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5.2% 감축해야 한다. 어떤 나라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면 잔여분 배출권을 제삼국 기업에 팔 수 있도록 하고, 반대로 감축 목표를 못 지키면 배출권을 사거나 벌금(독일은 t당 40유로)을 물린다. 이처럼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시장제도다.